

'4대 행복약속'으로 식품안전 강국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행복 실현 선결 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4대 행복 약속을 발표하였다. 4대 행복약속은,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리 편집실

PROMISE 01 | 국내·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앞으로 불량식품 판매·제조업자는 최고 10배 까지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거나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4월 국무총리실,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하여 집중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수시

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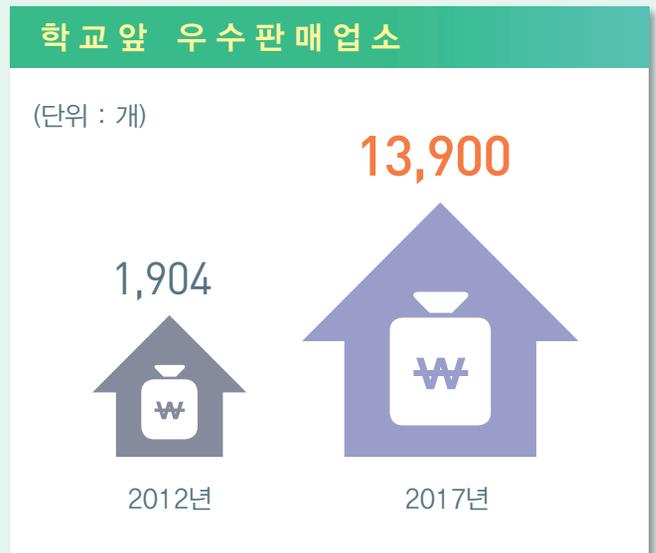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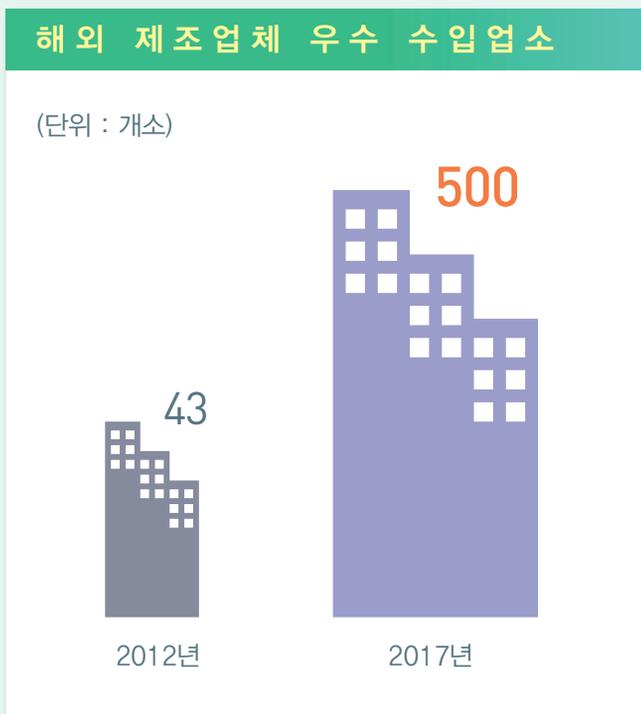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으로 식품위해사범은 형량 하한제 범위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제도로,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으나 올해부터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 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되어 처벌이 강화되며,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환수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 불량식품의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외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할 것이다.

이처럼 식약처가 먹을거리 범죄사범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국민행복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국민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PROMISE 02 | 아이들의 식생활이 더욱 안전해진다

학부모의 불만건수가 높았던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의 불량식품 판매가 완전히 근절된다. 식약처는 기존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하고 학교 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에도 어린이 보호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의 식품 판매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영유아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정하고 의무화를 추진하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50명 미만 어린이집의 영양관리

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단위 : 개소)



PROMISE 03 | 국민의 안심 지수가 높아진다

앞으로는 식품 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동안 10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식품안전정보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것이다. 통합 운영되는 식품안전망은 국민들에게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며, 긴급 상황 시 위해식품을 경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식품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부처 간 식품위해 정보공유로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음식점 간판에 위생등급 표시와 위생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표시하도록 표시기준 개선,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 신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범사업 실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 구축,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 시행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기준과 제도를 세워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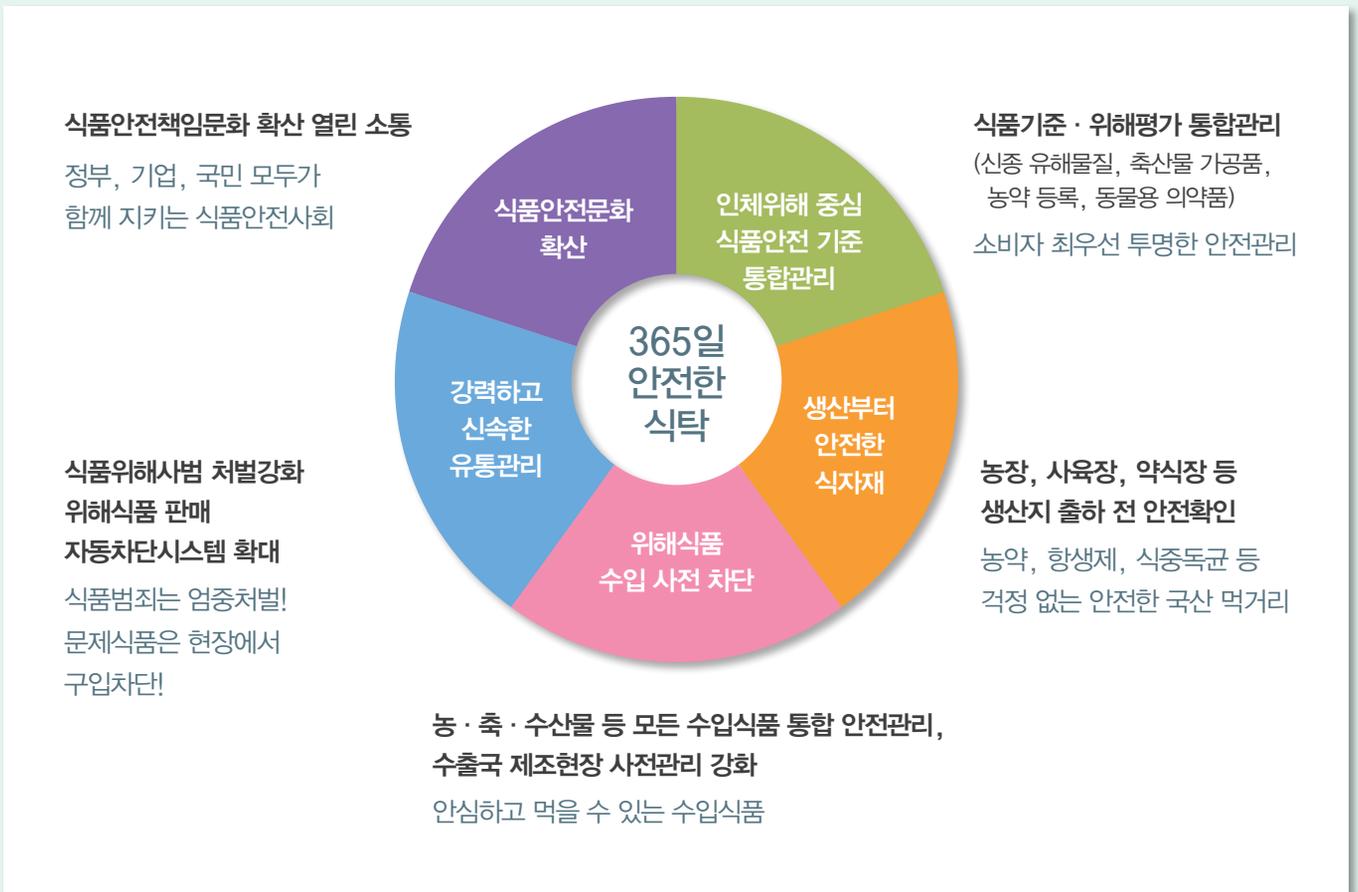
2013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추진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국민이 함께하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 어린이,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과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고, 불량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출범하는 등 민관이 합

동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과 감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5인 이상 또는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 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 점검 합동 단속·점검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함께 참여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편 조직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 간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특히,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소통 기능 강화 등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